

# 소비심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 가구 61% “돈 씹씹이 줄었다”

##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물가 급등의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10가구중 6가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2008년 3·4분기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37.7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0.1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4분기(33.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맞물리면서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때만큼 위축된 것이다.

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50)보다 낮을 경우 경기가 생활형편에 대해 비관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지수는 지난해 4·4분기(53.4)를 고점으로 올해 1·4분기(51.1), 2·4분기(47.8)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심리가 악화된 것은 기

름값 등 원자재가격 급등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증시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소비자지수는 모든 소득계층 및 연령대에서 하락해 물가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향후 소비 전망도 비관적이다. 1년 후 소비 수준을 예상하는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44.6을 나타냈다. 이 지수가 기준치(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4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이와 관련, 고유가 등 물가 급등의 여파로 국내 가구의 3분의 2 가량은 소비지출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유가급등에 대한 가계소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가구의 61.1%가 고유가로 인해 소비·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향목별로는 외식비의 소비지출 감소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비(32.6%) ▲의류비(11.6%) ▲식료품비(6.4%) ▲교양오락비(4.7%)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교육비를 줄였다

는 답변은 1.3%에 그쳤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줄일 수 있는 항목에 있어서도 외식비가 33.2%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22.6%)가 뒤를 이었다. 교육비를 지목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가구중 66.9%는 고유가로 차량 운영을 중지하거나

줄였다고 답했다. 또 차량 운행 감축은 하위소득 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 경제력, 인구분포 등을 감안해 무작위로 추출한 1천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LPG 공급가 9월 소폭 하락할 듯

이번 달에 돌격했던 국내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가격이 다음달에는 소폭 하락할 것인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26일 LPG업계에 따르면 9월 LPG 공급가격 책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8월 LPG수입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 LPG공급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LPG수입업체들의 8월 국내 수입 프로판가스는 t당 860달러, 부탄가스는 t당 89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프로판가스는 45달러, 부탄가스는 60달러가 인하됐다.

국내 LPG공급가격은 수입가격과 환율을 중심으로 각종 세금과 유통비용 등을 감안해 E1, SK가스 등 LPG수입업체들이 결정해 매달초에 각 충전소에 통보한다.

가스업계에서는 LPG수입가격 하락 정도를 고려할 때 9월 국내 LPG공급가격은 kg당 50원 안팎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현재 LPG공급가격은 E1의 경우 프로판가스는 kg당 1천313원으로, 부탄가스는 1천685원에 공급하고 있다.



올림푸스 '뮤-1060' 올림푸스 한국은 26일 얼굴 인식 기능의 가능 인원이 최대 16명까지로 강화된 콤팩트 카메라 뮤-1060, 뮤-1040, 뮤-1050SW 등 신제품 카메라 6종을 발표했다. 이번 올림푸스의 디지털 카메라 신제품은 인물 촬영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 기업들 “준조세가 법인세보다 많다”

### 전경련 104개사 조사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법인세보다 많고 증가 속도도 세금보다 훨씬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최근 주요 회사 1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4조7천735억원)의 1.5배에 달하는 7조4천691억원을 법정준조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 평균 납부액은 718억원이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 지방세, 목적세 등 총 25조5천46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법정준조세는 총 조세의 29.2%에 달한다.

법정준조세는 환경,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과 부가금, 예치금과 보증금, 출연금, 기부금, 사회보장 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 정부 발표 2차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 R&D → 새 기관 만들어 기능별 재편

〈연구개발 사업〉

###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26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과 진흥기관 등 29개가 13개로 통합된다.

R&D 관리기관의 통합은 기존 기관을 청산한 뒤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R&D 관리기관 ‘헤쳐모여’ = 정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R&D 지원 기관 6개를 3개로 통합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재단 3개를 1개로 합치기로 했다.

지경부는 통합 방식을 기존 기관에 다른 기관들을 붙이는 방안과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기존 기관을 합

### 지경부·교과부 기관 9개를 4개로 진흥기관 ‘부처 당 1개’ 원칙 통합

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나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한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을 청산하고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뒤 3개 기관을 신설해서 기능별로 인력과 조직, 자산, 예산 등을 재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기관의 고유 사업과 함께 해당 분야의 R&D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과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등은 R&D 관련 기능만 통합되는 3개 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지경부는 28일 산업연구원 주체로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인 9월24일 이후에 해당 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10개 진흥기관 4개로 = 정부는 진흥기관을 ‘부처 당 1개’ 원칙을 적용해 복수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의 10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조직개편 이전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이 부처 통

합 이후에도 각각 유지되면서 업무 중복 비효율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만들고 방송위는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을 합쳐 가칭 방송통신진흥원을 만든다.

문화부 산하의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가칭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출연기관인 한국산체료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되며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주무 부처가 문화부로 일원화된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저작권위원회로 통합한다.

### 통폐합 금융살 민영화는 미흡

정부가 26일 공공기관 2차 개혁안에서 각종 진흥원과 연구개발(R&D)관리기관 통합을 빼개로 한 40개 기관의 개혁방향을 확정하면서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을 예고했다.

◇ 키워드는 ‘통합’ = 1차로 발표된 41개 기관이 주로 민영화와 기능조정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차 발표에서는 ‘통합’이 키워드가 됐다.

2005년에 17개 기관이 신설되는 등 참여정부 5년 간 45개 기관이나 설립되면서 같은 정책

이에 대해 고용안정도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처에 따라 다르다”며 “모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흡수 가능하면 흡수하고 아니면 자연 감소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되는 기관의 경우 관리·지원 인력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이전이 확정된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놓고도

### 통합 위주... 시너지 효과 노려 인력 조정·지방 이전이 난제

목적은 가진 기관이 양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개혁안에는 비슷한 기관을 묶어서 비효율을 깨고 시너지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4개 부처에 10개나 됐던 ‘부처당 1개 진흥원’ 원칙에 따라 통합하고 R&D사업 관리기관도 9개에서 4개로 합쳤다. 또 업무가 융합되는 경향에 따라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2개 기관씩을 하나로 묶었다.

◇ 대대적 인력조정 = 통합 및 폐지 기관이 32개나 되고 일부 기능이 축소되는 곳도 7개나 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특히 인력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같듯이 예상된다. 각각 진주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포함해 인터넷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개발원, 노동교육원 모두 13개 기관이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 아직 미흡 - 민영화 규모에 관심 = 이번 R&D 관리기관이 나 각종 진흥원의 통폐합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지만 관심을 모았던 민영화 대상이 28개에 그치면서 국민들의 기대치에 아직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28개 중에서도 당연히 팔아야 할 공적자금 투입기관을 빼면 14개 기관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연립뉴스

## 9월 발표 3차 개혁안에 뜨거운 관심

### 향후 전망은?

지난 11월 1차에 이어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르면 9월 초순 마지막으로 발표될 3차 방안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개혁 대상에 오른 기관은 전체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이번 선진화 대상기관이 총 100여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3차 방

안에는 20여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과 기보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 뒤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일찌감치 민영화 계획이 제시됐지만 ‘국가대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전력산업 선진화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달 11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력산업의 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해 독립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 전력그룹사인 한전KPS는 전력설비 제작과 설치, 보수 공사를 맡고 있어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

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한계노출이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의 규모나 재정적 정도 등을 감안해 공개토론회를 가진 뒤 3단계 선진화 방향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 정밀안전진단업무,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방송 및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 중복업무는 기능 재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뉴스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명빌딩3층)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입) (062) 227-9970